

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정부 '상속주택'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

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.

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 일 기준으로 '소유 지분율이 20% 이하, 소유 지분율의 공 시가격이 3억원 이하'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.

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.

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%가 아니라 주택지 분의 20%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.

종부세는 2주택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뛰어들기에 1 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뛰어들는다.

집은 고가의 자산으로 이러한 중과 자체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, 상속 주택은 자 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, 상속으로 받 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 지분율이 낮다면 상속세는 내지만 보유세(종부세) 대상에서는 빼주는 것이 다.

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 자가 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부 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역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납세자 국세증명, 정부24앱으로 금융기관에 자동 전송해준다

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 명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, 정부24 앱에서 요청하면 국 세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해주 는 서비스가 개시됐다.

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 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.

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 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.

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 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.

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기관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세증 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.

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 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,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.

관세청 "신용카드 포인트로 '관세' 납부 하세요"

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용한 신용 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고 16일 밝혔다.

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 부할 경우 적용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,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.

이에 따라 적용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,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 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, BC, 신한, 씨티, 전 북,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.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,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 (Web)이나 모바일 지로 앱(App)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.

또한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 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.

관세청은 "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 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"며 "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"이라고 밝혔다.